

“법 감정 괴리”...신안 염전 착취사건 양형 도마 위



설법식 광주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 광주고법 국감서 질타

해당 피의자·피해자 ‘미분리’ 논란도

전남청 “법적 근거·가족 회신 없었다”

최근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신안 염전 착취사건’의 피의자에게 내린 형이 국민 법 감정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광주고법 등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설법식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중증 지적 장애인인 37년이나 실종돼 신안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며 “가해자가 2019년부터 4년간 6천600만원의 임금을 안 줬 기소했는데, 어느 정도 형량이 적정한가”라고 물었다.

설 법원장이 질의한 사건을 잘 모르겠다고 하자 주 의원은 “벌금 300만원이 나왔는데 그나마도 집행유예였다. 눈을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양형에 있어서 사법부와 국민 간 괴리가 크다”며 “가해자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4년 사건도 놀랍다고 할 수준이었는데, 3명 중 1명만 실행을 받았다”며 “구속됐던 염전주는 석방 후 군의원이 돼 재선의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설 법원장은 “적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관내 법원 판사들과 토의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지난 8월 1심 선고 받은 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그는 지난 2023년 관계 당국의 점검과 신

안군의 의뢰로 입건됐는데, 수사 당시 피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 사건의 피해자는 2014년에도 수사 당국이 유사 사안의 피해자로 인지했으나 구조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대목에서 비판이 거세다. 이에 대해 전남경찰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수사 착수부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의뢰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했다”며 “의사에 반해 보호시설 등으로 옮길 법적 근거가 없어 분리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사건 담당자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가 끊어버렸고 관련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2014년 당시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해선 확인 중”이라고 부연했다. /안재영 기자

‘재심 무죄’ 김신혜 항소심 시작부터 공방 치열

檢, ‘사망 보험금’ 노트 등 증거 재신청

박준영 변호사 “위법 수집...항소 기각”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살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신혜(47·여)씨와 검찰이 항소심 첫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1일 존속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였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2000년 8월 3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김씨는 수사 단계에서 자수했던 것과 달리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상고했으나 줄줄이 기각돼 무기수가 됐다. 그러다 언론 등을 통해 이 사건의 위법 수사 의혹이 불거졌고 김씨가 신청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2015년 재심이 개시됐다. 김씨의 건강 악화 등 사유로 10년 가까이 이어진 재심의 결론은 무죄였으나 검찰의 항소로 그는 석방된 지 약 10개월 만에 다시 재판대에 섰다. 검찰은 “피해자가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사용처 등이 적혀 있는 노트를 형사소송법상 절차 위반 행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무조건 배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재심에서 배제된 증거의 채택을 요청했다. 이 노트에 대해 박준영 변호사는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했던 물품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 일부만 뜯어낸 사본이다. 오염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는 만큼 검사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김씨 측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 등에 대한 의견이 대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주간의 검토 시간을 주고 오는 12월 16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안재영 기자

보훈부, ‘비위 의혹’ 양재혁 5·18유족회장 감사

‘자격 미달 회원 가입’ 등 진정 제기돼

당사자 “회장 취임 전 일...성실히 소명”

양재혁 5·18유족회장장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한 국가보훈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21일 보훈부에 따르면 5·18민주유공자유족회에 대해 지난 13~17일 정기 감사를 진행하던 중 양 회장과 간부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받았다. 진정서에는 양 회장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A씨를 회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간부 B·C씨를 통해 위조한 서류를 보훈부에 제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간부 A씨는 지난 6월 서울시지부 사무국장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두 달 치 급여의 절반을 빼돌렸고 양 회장은 채용 비리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지부장 D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이사회를 임의로 열어 ‘경고’ 처분으로 감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같은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보훈부는 다음달 7일까지 감사 일정을 연장하며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 회장은 “A씨의 회원 가입과 채용 비리 의혹 모두 회장 취임 전 발생한 일”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명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화순 주민 등으로 구성된 전남법주민연합회는 21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시는 동북댐 수문을 설치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권을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서형우 수습기자

“광주시, 동북댐 수문설치·관리권 이양을”

화순 주민 등 전남법주민聯 촉구

市 “내달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화순 주민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동북댐 수문 설치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 이양을 촉구했다. 전남법주민연합회 소속 회원 50여명은 21일 오전 9시 30분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시는 동북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을 화순군에 자진 이양하고 민관·의회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북댐은 수문이 없어 폭우가 내린 1985년과 2020년에도 계획홍수위(치수 공사 설계 시 기준이 되는 높이)를 넘겨 붕괴 직전까지 갔다”며 “화순 군민들이 광주시에서 수문 또는 직경 4m 이상의 여수로 설치를 요청했지만, ‘필요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동북댐에는 전도게이트가 설치돼 있으나 총저수량의 5%인 588만만 조절할 수 있고, 하천유지용 여수로만 시간당 5만 정도

만 방류돼 홍수 조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광주시는 즉각 수문과 여수로를 설치하고, 민·관·의회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운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다음 달 중 화순군과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형우·이연성 수습기자

금타 노조, 오늘부터 이틀간 ‘부분 파업’

금호타이어 노사의 일관협 및 성과급 배분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21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틀간 광주·곡성·평택공장에서 근무조별로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 양일간 파업 참여 인원은 노조 추산 3천400여명이다. 파업과 함께 노조는 22일 오후 1시 30분 공장별로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성학 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CMYK